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형국, 박상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355
천안만화호텔 PSPD, 뉴욕뉴리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연락: 연대사업국 박원석: 723-5300) 011-457-9514
제 목 재벌 전면개혁, 재벌총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
날 짜 1997. 1. 30. (충 1 쪽)

보 도 자 료

시민·사회·종교단체 재벌전면개혁, 재벌총수 경영일선으로부터 퇴진 촉구 - 변칙증여, 경영권세습, 부당내부거래 규탄 -

일시 및 장소: 98. 1. 30(금) 을지로 2가 SK그룹 본사 앞

2전 12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등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재벌의 경제위기 책임을 물어 재벌의 전면개혁과 총수의 경영일선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2. 금융위기, 외환위기로 대변되는 오늘의 경제난은 재벌의 과다차입 경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들은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그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근본적 자기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는 현 총수들의 경영일선 후퇴를 비롯하여 변칙적 재산, 경영권의 세습금지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의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를 비롯한 위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벌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끝

재벌의 전면개혁과 재벌 총수의 경영일선으로부터의 퇴진을 촉구한다

최근 재벌기업들의 개혁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와 관련하여 재벌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벌의 몇몇 개혁 방안이, 현재와 같은 초유의 위기상황을 가져온 그들의 책임을 생각할 때 과연 충분하고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재벌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일가족의 대규모 기업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개혁조치가 왜 더 빨리 추진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과연 현재 재벌들의 자기개혁 노력이 기만적이지는 않은지를 예리하게 물어야 한다.

현 경제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재벌의 과다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부실이 현 금융,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총수독재하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경영의 전횡, 그로 인한 비효율성, 변칙적인 경영권, 재산의 세습구조 등 구태의연한 족벌경영이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동안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비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다. 그 비리와 폐해가 얼마나 심하면 IMF가 재벌개혁을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겠는가.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및 책임규명, 그리고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재벌 총수들은 경영일선으로부터 퇴진해야 한다

재벌총수 전횡적 족벌경영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부실경영, 변칙세습, 정경유착, 경제파탄의 근원에는 재벌 총수의 무능한 독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점을 숨기고 정리해고제 도입을 내세우며 마치 기업부실화의 책임이 다른데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재벌 총수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분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재벌총수들은 경영일선에서 즉각 물러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재벌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 재벌들의 변칙적인 경영권 및 재산의 세습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총수지배체제는 전문경영인들을 소외시키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절대권력을 비정상적으로 세습시키면서 그 모순을 더욱 확대·심화시켜왔다. 특히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과